

미·중 분쟁과 코로나 시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변화와 한국의 대응



미·중 분쟁과 코로나 시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변화와 한국의 대응

인천대학교 중어중국학과

이현태 교수 (xiantaikor@gmail.com)

목 차

1.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대내외 환경 변화
2. 일대일로 구상의 미래
3. 한국의 대응 전략

- 2013년 시작된 일대일로 구상은 2021년 현재 8년 차를 맞이했는데, 그동안 중국은 이를 통해 인프라 건설, 무역 투자 등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해 옴.
- 그러나 최근 일대일로 구상은 여러 대내외 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적인 구상의 성격도 바뀔 것으로 예상됨.
 - 미·중 분쟁 격화, 일대일로 참여국 부채 증가, 코로나19 확산, 중국의 ‘국내대순환’ 전략 추진 등이 큰 영향을 줄 것임.
 - 대내외 어려움으로 인해 일대일로 사업의 전체 규모는 축소되는 반면 수익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한 사업의 질적인 개선이 예상되고, 코로나 시대를 반영한 건강·디지털 실크로드가 전면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
- 한국은 유라시아의 번영을 도모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 일대일로 구상과 협력하되 아래와 같은 협력 원칙을 준수해야 함.
 - (사업 협력에서의 국제 규범 준수) 글로벌 인프라 사업에 대한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인 수원국의 재정건전성, 프로젝트의 개방성, 투명성, 경제성(수익성)을 준수하는 사업에 한하여 참가해야 함.
 - (비전략적 사업 위주의 협력)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은 미·중 전략 경쟁과 관련한 ‘전략성 사업’에 대한 참여를 최대한 피하고 경제성 위주의 ‘비전략적’ 사업에 주력해야 함.
 - (비전통적 안보 협력의 강화) 한·중은 열악한 유라시아 지역의 보건의료 증진을 위해 마스크, 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 제공, 의료진 파견 등에서 공조하고 장기적으로는 감염병 공동연구, 감염병 컨팅전시 프로그램 마련, 국경공동방역시스템 구축 등을 주도하면서, 환경, 학술, 문화 교류 전통 안보·소프트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 또한 확대해야 함.
 - 현재 일대일로에 대한 한·중 협력에서는 이 같은 연성 협력이 최선으로, 미·중 분쟁의 유탄을 피하면서도 유라시아 개도국들에게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며 사드 이후 영클어진 한·중 간 감정을 완화하는 데도 유용한 방식임.

1.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대내외 환경 변화¹⁾

1) 2021년, 일대일로 구상의 현재와 도전

- 2013년 하반기 카자흐스탄과 인도네시아에서 시진핑 주석에 의해서 공표된 일대일로 구상은 2021년 현재 8년 차를 맞이했는데, 그동안 중국은 이를 통해 인프라 건설, 무역 투자 등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해 옴.
- 그러나 최근 일대일로 구상은 여러 대내외 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적인 구상의 성격도 바뀔 것으로 예상됨.
 - 미·중 분쟁 격화, 일대일로 참여국 부채 증가, 코로나19 확산, 중국의 ‘국내대순환’ 전략 추진 등이 큰 영향을 줄 것임.
- 한국은 동북아 이웃 국가로서 중국의 대외 전략인 일대일로 구상 변화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함.

2) 일대일로 구상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

■ 미·중 분쟁 격화

-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무역적자 문제로 시작된 미·중 분쟁은 최근 기술, 산업, 인권, 지역(타이완)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 격화되고 있음.
 - 2019년 6월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Indo-Pacific Strategy Report)에서는 중국을 역내 시스템의 수정주의 국가이자 사실상(de-facto) 적국으로 규정하였음.
 - 2021년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도 2021년 6월 열릴 G7 회의에서 중국의 신장(新疆) 위구르족 탄압에 대한 공동 대응을 추진한다고 밝히는 등 민주, 인권을 기치로 동맹국을 규합하여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는 양상임(Reuters, 2021/04/24).

1) 아래 1, 2장은 Lee, hyuntai(2021), 「CJK's economic cooperation though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n the post-COVID-19 era」, 『Trilateral Cooperation: Young Professionals Research Project』,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의 일부 내용을 크게 수정 보완하여 작성함.

- 미·중 분쟁 격화 속에서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명백한 반대 의사를 노골적으로 표시해 왔음.
 - 2020년 5월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대중국 전략보고서(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에서는 일대일로 구상이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군사적 접근을 의도하고 있으며 저품질, 부패, 환경오염, 공공 감시와 지역공동체 참여 결여, 불투명한 차관, 거버넌스와 재정문제를 일으키는 계약 등이 문제라고 지적함.
- 미국은 일대일로 구상 등 중국 중심의 지역 블록(block)을 약화하고 이에 대항할 미국 중심의 동맹 블록을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2017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담에 참석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을 최초로 표명하며 역내에서의 대중국 견제 의도를 드러내었고(Financial Times, 2017/11/10), 이는 2019년 6월 미국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 국가 전략으로 구체화 됨.
 - 2020년 4월 폼페이오 전(前) 국무장관은 호주, 인도, 일본, 뉴질랜드, 한국, 베트남과 경제번영네트워크(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를 형성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중국의 경제 기반인 글로벌 공급망(GPN·Global Production Network)을 약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Reuters, 2020/5/4).
 -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의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도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지역안보협의체인 ‘쿼드(Quad)’가 인도-태평양 전략 정책의 근본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지역 동맹에 기초한 대중국 압박이 강화될 것임을 천명(Japantimes, 2021/1/30)

■ 일대일로 참여국 부채 증가

- 일대일로 참여국 일부에서 국가 부채가 증가하면서 일대일로 구상이 참여국을 ‘부채의 덫(debt trap)’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서방의 비판이 지속되고 있음.
 - 2018년 3월 미국의 싱크탱크 세계개발센터(CGD)는 일대일로에 참여한 68개국 중 8개 국가인 지부티,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몰디브, 몽골, 파키스탄,

- 몬테네그로 등 일부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채무 상황이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함(Hurley, Morris, and Portelance, 2018).
- 세계은행(WB)의 연구자들도 중기적으로는 분석대상 43개국 중 12개 국가가, 장기적으로는 30개국 중 11개 국가의 GDP 대비 채무가 BRI 사업으로 인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함(Luca Bandiera and Vasileios Tsiropoulos, 2019).
 - 2019년 3월 폼페이오는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부채함정외교(debt-trap diplomacy)'를 실행하며 비록 참여국이 처음에는 싸게 다리와 도로를 건설하게 되어 좋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결국 제공된 경제적 가치를 크게 초과하는 정치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함(SCMP, 2019/03/28).
 - 2021년 3월 미국의 에이드데이터 연구소(AidData),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영국의 글로벌개발센터(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독일의 키엘 세계경제연구소(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는 공동보고서에서 중국과 개도국 간 100건의 대출 계약을 분석하고, 많은 계약에 중국에 대한 우선 상환, 중국에 대한 적대행위 금지, 파리기림 가입 금지 등 독소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함.
 -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 국제전략연구소(CSIS), 허드슨 연구소(Hudson Institute) 등 주요 서방 연구기관 및 언론들도 '부채함정외교 (debt trap diplomacy)'의 프레임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부채 문제를 지속해서 거론해 오고 있음.
- 중국은 이런 비판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난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일대일로 구상이 참여국에 경제적 이익과 민생복지를 가져주었다고 주장함.
- 시진핑 주석은 2018년 4월에 개최된 보아오(博鳌)포럼에서 BRI는 '중국의 음모 (Chinese plot)'가 아니라고 직접 반박함(Reuters, 2018/04/11).
 - 2019년 4월 중국 정부의 대외 채널인 신화통신은 일대일로 분석 기사를 통해 일대일로 구상은 참여국의 황폐한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광범위한 협의, 공동 기여, 이익 공유의 원칙을 준수하며, 참여국의 일대일로 관련 부채의 수준도 별로 높지 않다고 주장함(Chinadaily, 2019/04/14).

- 2021년 4월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피지의 사례를 들면서 일대일로 구상은 태평양 섬나라의 민생복지를 촉진하기 위한 ‘혜민공정(惠民工程)’이지 ‘부채함정(债务陷阱)’은 아니라고 밝히기도 하였음(중국 외교부, 2021/4/21).
- 일부 외국 연구자들도 사업 사례 연구 등을 통해 서방의 BRI 비난이 충분한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함(최필수, 2019; Wignaraja, G., et al. 2020).
- 다만 서방의 비판이 과장된 측면이 있으나 일부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 참여국 부채 증가, 환경 악화, 주민 반대, 법령 무시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며 중국이 이에 대응하면서 일대일로 구상의 성격도 변하고 있음.
 - 2019년 4월 제2차 일대일로 국제협력포럼(一帶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에서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이 보다 높은 단계에 진입하고 세부 영역에서 구체적 성과들을 거두는 ‘일대일로 2.0’ 단계에 들어설 것이라고 천명함(一帶一路网, 2019/4/25).
 - 특히, 중국은 이 포럼에서 ‘일대일로 용자지도원칙(一帶一路融资指导原则)’과 ‘일대일로의 채무 지속가능성 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一帶一路债务可持续性分析框架)’를 발표하면서 참여국의 채무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新华网, 2019/4/26).

■ 코로나19의 확산

- 일대일로 구상의 핵심은 중국 중심의 역내 ‘연계성(connectivity)’ 확대인데, 코로나19의 확산은 이 연계성 강화에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 일대일로 구상은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6대 경제회랑을 중심으로 인프라, 무역, 금융, 정책, 인문 교류, 즉 오통(五通)을 추진하면서 공동 번영을 추구하고자 하나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는 이를 어렵게 만들고 있음.
 - 2020년 3월 이후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건설은 중지되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고속철도공사, 캄보디아에서는 시아누크빌의 경제특구 건설이 중단되었으며, 방글라데시, 케냐,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등에서도 프로젝트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Forbes, 2020; Silk Road Briefing, 2020).

- 또한, 코로나19는 일대일로 참여국들의 경제와 사업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대중국 부채상환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장기적으로 일대일로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임.
 - 이집트는 2020년 2월 세계에서 2번째 큰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44억 불)을 연기하였으며, 4월 탄자니아는 100억 달러의 바가모요 항만건설 사업을 중국에 99년 임차 등 불리하게 계약되었다는 이유로 취소하였고, 4월 파키스탄은 300억 불의 발전소 건설비 상환 조건을 완화해줄 것을 중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Times of India, 2020/6/24).
- 코로나19는 국가 간에 비대면 교류 활성화와 강력한 초국경 방역 활동을 강제하기에 미래 일대일로 구상의 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국내대순환' 추진

- 중국 경제는 구조적 저성장 심화, 미·중 분쟁 격화, 코로나19 충격이라는 3중고를 겪고 있으며 이런 경제 활력의 저하는 일대일로 구상 같은 과감한 해외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2021년 중국 경제는 신(新)성장동력 발굴, 질적 발전으로의 전환, 미·중 분쟁 여파 축소, 첨단기술 자립자강, 코로나19 상흔 극복, 지역·계층 간 격차 해소 등 많은 내부 문제가 심화하고 있어서 대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기에 좋지 않은 상황임.
- 최근 중국 정부가 14.5 계획(2021~2025년)에서 선보인 '국내대순환' 전략도 결국 내수 확대와 국내 공급망 확충에 주력하여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일대일로 구상의 동력을 다소 떨어뜨릴 소지가 다분함.
 - 최근 미·중 분쟁 등 반세계화 경향이 강화되면서 그간 중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한 글로벌 무역·투자·GVC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중국 정부가 '국내대순환'을 추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임.
 - '국내대순환' 전략은 "내수확대 전략을 공급 측의 구조개혁과 유기적으로 결부시켜 혁신에 의한 발전과 질 높은 공급으로 새로운 수요를 유도하고 창출한다"라는 것으로써(政府工作报告(정부공작보고), 2021), 대외경제와의 연결 고리가 약화된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구조개혁을 통해서 질 좋은 공급을 하고 이로써 수요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국내대순환을 형성하고자 함.

-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국내대순환에 입각하여...글로벌 요소와 자원을 유치할 수 있는 강력한 증력장을 형성함으로써 대내외 쌍순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政府工作报告, 2021), 이는 중국의 강대한 국내시장을 활용하여 대외 요소를 끌어들이는 전략으로 국내 요소가 적극적으로 해외로 진출하는 일대일로 구상과는 차이가 있음.

2. 일대일로 구상의 미래

1) 일대일로 사업의 전반적 축소

- 1장에서 열거한 최근의 대내외 환경변화는 모두 향후 일대일로 구상의 동력을 약화하는 쪽으로 작용하면서 사업을 전반적으로 축소할 가능성이 매우 큼.
- 우선, 미·중 분쟁 격화 속에서 미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압박은 외교적, 군사적으로 미국과 밀접한 일본, 한국, 호주 등 여러 국가의 일대일로 협력 의지를 위축시키면서 일대일로 구상의 외연 확장을 방해할 것임.
 - 미국과 전통적으로 깊은 정치·경제·군사·외교 관계에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대의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캐나다, 인도, EU의 영국 등이 대표적임.
 - 향후 미·중 분쟁이 더욱 격화되면 여러 국가가 미국 중심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와 중국의 일대일로 참여를 두고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음.
 - 이미 2021년 4월 호주 정부는 빅토리아주 정부가 중국과 체결한 일대일로 업무협약(MOU)을 자국의 외교정책과 모순되고 외교관계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함(CNN, 2021/4/22).
- 중국 또한 미·중 분쟁 격화 속에서 미국의 파상 공세를 막기에도 급급하기에 이전처럼 유라시아 개도국들과 일대일로 확대를 한가롭게 도모할 여유가 많지 않을 것임.
- 참여국의 부채 증가(채무불이행), 환경 파괴, 주민 반대 등 일대일로 사업을 둘러싼 잡음 증가도 일부 국가들의 참여 동력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중국 사업주체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여 일대일로 사업의 양적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중국과 참여국이 전보다 조심스럽게 문제 발생 소지가 적은 사업들을 위주로 추진한다면 일대일로 사업의 질적인 면은 개선될 것이나 양적인 팽창은 어려울 것임.
- 중국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과 국내 중심의 ‘국내대순환’ 전략도 일대일로 구상 확대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임.
 -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국제대순환’에 중점을 두었고 일대일로 구상은 유라시아 대륙을 향하는 국제대순환 전략이나, 이미 구조적 경기 하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대일로 사업을 확대하기에는 경제적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중국이 선보인 증장기 전략인 ‘국내대순환’ 전략 또한 노골적으로 ‘국내’에 방점을 찍으면서 대외 진출 팽창을 도모하기 어려운 중국의 현실을 잘 보여준 것으로 평가됨.
- 결국 중국은 한정된 경제적 자원을 중서부 저개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끄는 등 국내 발전에 매진할 것으로 생각됨.
- 코로나19 또한 국가-국가, 지역-지역의 공간적·물리적 연결을 통해 무역·투자·인프라·인적 교류 확대를 추구했던 기존 일대일로 사업 방식에 타격을 가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일대일로 사업을 축소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임.
- 중국의 대표적인 동남아 관문인 광시장족자치구(广西壮族自治区) 핑샹시(凭祥市)는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 2월부터 세관 통과시간을 하루 5시간으로 제안하고 검역 절차를 엄격히 실시하는 등 수출입 상품의 운송을 제한하였고 이는 중국-베트남의 국경 무역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김한솔, 이현태, 2021).
- 2014년 일대일로가 본격 추진된 이후 2019년까지 중국의 총투자 규모는 7,299억 달러(GDP의 5.2%), 2018년까지 관련 대출은 대략 5,000억 달러 내외(GDP의 3.5%)로 추정되는데(이치훈, 2020), 앞으로도 중국이 일대일로 투자와 대출을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회의적임.

2) 일대일로 사업의 질적 고양

- 일대일로 사업은 전체적으로 축소되겠지만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은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사업의 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개선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 2020년 5월 양회에서 리커창(李克強) 총리도 일대일로의 방향에 대해서 “고품질(高品質) 일대일로를 공동 건설하며, 함께 논의하고 함께 건설하고 함께 누리는 것을 견지하고, 시장규칙과 국제규칙을 따르며, 기업의 주체적인 역할을 발휘시키고, 윈-윈 협력을 전개하면서, 대외투자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한다”라고 언급하면서 일대일로의 질적 개선이 주요한 목표임을 밝힘(政府工作报告, 2020).
- 2019년 4월 일대일로 국제포럼에서 참여국의 부채 증가, 환경사회 기준 미달, 중국 기업 독점 등에 대해서 ‘일대일로 용자지도원칙’ 등을 통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함.

- 동 포럼에서는 구체적으로 첫째, 일대일로로 투자 원칙과 일대일로 투자 수원국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둘째, 일대일로 사업의 건설, 운영, 구매, 입찰 등에서 국제 규범과 각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셋째, 더 많은 국가가 일대일로 투융자, 제3국 시장 공동진출 등에 참여하도록 하여 일대일로의 내용과 외연을 한층 넓히고, 글로벌 컨센서스를 확보하여 한 단계 포괄성을 갖춘 글로벌 구상으로 진일보하며, 넷째, 중국의 기업과 상품이 일대일로 연선국가로 진출하는 일방향에서 중국의 시장을 한층 대외 개방하여 외국의 기업과 상품이 들어오는 것을 더욱 원활하게 하는 쌍방향을 지향하겠다고 공표함(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2019).
- 결국 일대일로 사업 개선의 핵심은 사업의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확보, 사업 진행에서의 국제규범 준수, 기업이 중심이 되는 사업 추진, 다른 국가들의 참여 유도과 글로벌 컨센서스 확보, 중국 시장 개방을 통한 쌍방향 지향 등으로 이는 그동안 일대일로 사업에서 불거지고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중국이 부채합정외교 등 비판에 빌미를 주었던 실패 사례를 줄일 필요가 있는 데다가 경제 하강으로 당장 동원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전략성’보다는 ‘상업성’을 중시하고 ‘정부’보다는 ‘기업’이 주도하는 일대일로 사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해 보임.
- 결국 ‘수익이 보장되고 기업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사업이 좀 더 선호되고 시행될 가능성이 큰데, 일대일로 개도국 지역에 그런 사업이 많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사업의 질적 개선은 필연적으로 양적 감소를 동반할 것으로 보임.

3) 건강과 디지털을 앞세운 새로운 ‘연결성’ 추진

- 일대일로 구상은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감염병 방지와 비대면 교류를 지향하기 위해 건강 실크로드(健康丝绸之路)와 디지털 실크로드(数字丝绸之路)를 앞세운 새로운 ‘연결성’을 확대하고자 할 것임.
- 중국은 건강 실크로드를 추진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백신·치료제, 산소호흡기 등 의료장비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국경 세관, 초국경경제합작구, 해외 산업단지, 인프라 건설지 등 협력 지역에 국제 병원, 방역 물품 기지, 의료품 생산 등 방역 의료 시스템을 연계하고자 할 것임.

- 초국경 국제물류시스템에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을 활용한 자동화, 무인화, 네트워크 플랫폼을 확대하는 등 비대면 특성을 강화하여 향후 다른 감염병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화물 운송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임.
 - 나아가, 비대면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을 국가 간에도 전개하여 국경 무역에서 단순 소매상(代工)의 비중을 줄이고 온라인 거래를 통한 대형 도매 판매의 비중을 늘려서 국제 전자상거래의 확대를 도모할 것임.
 - 이런 변화는 도로, 전력망, 공항 등의 물적 자산을 나타내는 하드 인프라 연결성(Hard Infrastructure Connectivity)에 집중되었던 일대일로1.0에서 정책, 법제도 및 표준, 시스템적 연계인 소프트 인프라 연결성(Soft Infrastructure Connectivity)을 강조하는 일대일로2.0으로의 전환이기도 함(오윤미, 2019).
- 건강과 디지털을 앞세운 신(新) 실크로드 구상은 미·중의 전략적 경쟁 속에서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의도에도 부합하기에 앞으로 강력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
- 2020년 6월 열린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화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19 충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일대일로를 통한 연대를 확대하자고 천명(新华网, 2020)
 - 2021년 4월 보아오 포럼 개막 연설에서도 시주석은 “백신 개발과 생산, 분배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의 백신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라면서 “전 세계 공공 위생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인류 위생건강 공동체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함(新华网, 2021/04/20).
 - 2021년 4월 왕이 외교부장은 코로나가 심각해진 인도에서 백신을 받기 어려워진 남아시아 5개국(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외교장관과의 영상 회의에서 자국산 백신 공급 의사를 밝혔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긴급물자 비축고를 공동 설립에도 합의함(United News of India, 2021/04/28).
 - 중국은 2021년 4월 현재 80여 개국과 3개 국제기구에 자국 백신을 지원했고 백신을 수출한 국가도 40개국이 넘으며, 10여 개국과는 백신을 공동 개발하며 협력 수준을 높이고 있음(한국일보, 2021/4/7).

[표 1] 일대일로 구상 변화 전망

	규모	중점 분야	성격	중점 주체	리스크 관리	국제협력 추진	국제 규범 준수
前	大	인프라 등 기존 5通	전략성, 상업성 병행	정부	弱	弱	弱
後	小	건강·디지털·플랫폼	상업성 위주	기업	强	强	强

자료: 저자 작성.

3. 한국의 대응 전략

1) 일대일로 협력 현황

- 한국은 일대일로 구상이 표방하는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지지하면서 정상회담 등을 통해 수차례 협력 의사를 밝혀 왔는데, 한·중 양국 정부가 주로 논의해 온 협력은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공동 진출하는 방식임.
 - 한국의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지역적으로 겹치는 제3국에서 상호 비교우위를 살려 공동진출을 하자는 것임.
 - 2015년 10월 리커창 총리의 방한에서 한·중 제3국 공동진출 협력에 대한 양해 각서가 체결되었고, 인프라 건설, ICT, 환경 등 분야에서 제3국 시장을 공동 개척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함(외교부, 2015).
 - 2017년 11월 방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북방·신남방정책과 일대일로 구상 간 협력을 강조하였고, 2018년 2월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중점사업 리스트 작성과 성공사례 발굴을 위한 지원에 합의함(기획재정부, 2018).
 - 한국 외교부와 중국 상무부도 2018년부터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1.5트랙 세미나를 개최해 왔는데, 2019년 11월 세미나에서는 ① 한·중 제3시장 인프라 발전 포럼 공동 개최, ② 한·중 해외사업 민관 협의기구 설립, ③ 해외 산업단지 시범 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제3국 산업단지 한·중 협력수요 공동조사 확대 시행, ④ 한·중 공동투자 펀드 설립을 위한 단계별 한·중 금융협력 체계 구축에 합의함(외교부, 2019).
 - 그러나 그동안 일대일로 사업에 한국이 참여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는 중국이 전담하는 일대일로 사업의 특성, 사드 갈등 이후 한·중 간 협력 자체의 부재 등에서 비롯된 것임.
- 이제 중국이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일대일로 구상의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있기에 한국도 일대일로 구상의 향후 전개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답을 찾아야 할 것임.

- 한국은 특히 미·중 분쟁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당사자로서, 일대일로 협력이 한국에게 갖는 정확한 함의는 무엇이고,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기본 원칙을 수립하는 작업이 시급함.

2) 대응 방안

- 한국은 유라시아 지역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일대일로 구상과 협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협력 원칙을 준수해야 함.
 - (사업 협력에서의 국제 규범 준수) 글로벌 인프라 사업에 대한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인 수원국의 재정건전성, 프로젝트의 개방성, 투명성, 경제성(수익성)을 준수하는 사업에 한하여 참가해야 함(김준영, 이현태, 2019).
 - (비전략적 사업 위주의 협력)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은 국제 원칙이 준수되는 한에서 제한적으로 일대일로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고, 미·중 전략 경쟁과 관련한 ‘전략성 사업’에 대한 참여를 최대한 피하고 경제성 위주의 ‘비전략적’ 사업에 주력해야 함.
 - (비전통적 안보 협력의 강화) 한·중은 열악한 유라시아 지역의 보건의료 증진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마스크, 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 제공, 의료진 파견 등에서 공조하고 장기적으로는 감염병 공동연구, 감염병 컨팅전시 프로그램 마련, 국경공동 방역시스템 구축 등을 함께 주도하면서, 환경, 학술, 문화 교류 전통 안보·소프트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 또한 확대해야 함.
- 현재 일대일로에 대한 한·중 협력에서는 이 같은 연성 협력이 최선으로, 미·중 분쟁의 유탄을 피하면서도 유라시아 개도국들에게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며 사드 이후 잉클어진 한·중 간 감정을 완화하는 데도 유용한 방식임.
 - 다만, 미·중 분쟁 등 국제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정부 차원에서는 위와 같은 원칙을 천명하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되, 수익을 좇는 기업 차원에서는 일대일로 사업에 개별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투 트랙(Dual track) 전략으로 접근해야 함.
- 한·중 양국은 위와 같은 협력 원칙하에서 유라시아 수원국에 도움이 되고 제3국 공동진출 논의를 진행하는 플랫폼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초기에는 양국

정부가 플랫폼을 설립하되 실제적인 협력 협의는 기업 등 민간에서 주도하는 방식이 더욱 바람직함.

[표 2] 한국의 대응 전략

	원칙	협력 방향	배경
1	국제규범 준수	① 수원국 재정건전성 유지 ② 프로젝트의 개방성 강화 ③ 투명성 강화 ④ 경제성(수익성) 확보	중국의 고품질 일대일로 추진
2	비전략성/상업성 투자 중심		미·중 전략 경쟁
3	비전통안보 분야 협력 강화		코로나19
4	기업 위주의 지역협력 플랫폼 구성		

자료: 저자 작성.

참고자료

- 김준영, 이현태(2019). 「일대일로 구상(一帶一路倡議)」에 대한 국제 논쟁과 시사점. 정치정보연구 22(3). 한국정치정보학회.
- 김한솔, 이현태(2021). 「일대일로 구상의 변경 협력 전개: 중국 핑샹-베트남 동당 초국경 경제협력구를 중심으로. 중국지식네트워크 제17호.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 오윤미(2019),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의 주요 내용과 평가」, 세계경제포커스 Vol. 2 No. 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치훈(2020), 「코로나19로 일대일로 리스크 진단」, CSF 전문가 오피니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필수(2017),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개념적 이해-상업성과 전략성」, 한중사회과학연구 44권: 57-89. 한중사회과학학회.
- 최필수(2019), 「일대일로는 부채의 덫인가?」, INChinaBrief Vol.368, 인천연구원.
- Lee, hyuntai(2021), 「CJK's economic cooperation though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n the post-COVID-19 era」, 『Trilateral Cooperation: Young Professionals Research Project』,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 U.S. Department of Defense. 2019.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 The White House. 2020.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Anna Gelpert, Sebastian Horn, Scott Morris, Brad Parks, and Christoph Trebesch. 2021. "How China Lends A Rare Look into 100 Debt Contracts with Foreign Governments", AidData,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and 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
- Hurley J., S. Morris, and G. Portelance. "Examining the Debt Implications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Policy Paper 121, (March 2018), Accessed October 15, 2020, <https://www.cgdev.org/sites/default/files/examining-debt-implications-belt-and-road-initiative-policy-perspective.pdf>
- Luca Bandiera Vasileios Tsiropoulos, A Framework to Assess Debt Sustainability and Fiscal Risks under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bitstream/handle/10986/31904/WPS8891.pdf?sequence=4&isAllowed=y>
- Wignaraja, G., D. Panditaratne, P. Kannangara and D. Hundlani.,2020, "Chinese Investment and the BRI in Sri Lanka", Chatham House, Research Paper.
- "Australian government tears up Victoria's Belt and Road agreement with China, angering Beijing" CNN. 2021. 4. 22. <https://edition.cnn.com/2021/04/22/business/australia-china-belt-and-road-initiative-intl-hnk/index.html>. (검색일: 2021년 4월 24일)
- "Belt and Road Initiative is not a Chinese plot, Xi says" Reuters. 2018. 4. 11. <https://www.reuters.com/news/picture/belt-and-road-initiative-is-not-a-chines-idUSKBN1HI1HC>(검색일: 2021년 1월 12일)

- “Biden will push allies to act on China forced labor at G7 –adviser” Reuters. 2021. 4. 24.
<https://www.reuters.com/world/china/exclusive-biden-will-push-allies-act-china-forced-labor-g7-adviser-2021-04-24>(검색일: 2021년 4월 25일)
- “Chinese BRI in the post- Covid-19 period: Trapped in repayment and debt issues” The Times of India. 2020. 6. 24.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blogs/ChanakyaCode/chinese-bri-in-the-post-covid-19-period-trapped-in-repayment-and-debt-issues/>(검색일: 2021년 3월 1일)
- “China deepens vaccine diplomacy with 5 South Asia nations” United News of India. 2021. 4. 28.
<http://www.uniindia.com/china-deepens-vaccine-diplomacy-with-5-south-asian-nations/india/news/2381799.html>(검색일: 2021년 4월 28일)
- “Can the Health Silk Road Intervention Save China’s Belt Road Initiative from COVID-19 Geopolitical Fallout?”, Silk Road Briefing, 2020. 4. 7,
<https://www.silkroadbriefing.com/news/2020/04/07/can-health-silk-road-intervention-save-chinas-belt-road-initiative-bri-covid-19-geopolitical-fallout/>(검색일: 2021년 4월 25일)
- “China’s ‘Health Silk Road’ gets a Boost From COVID-19”, Forbes. 2020. 3. 27.
<https://www.forbes.com/sites/wadeshepard/2020/03/27/chinas-health-silk-road-gets-a-boost-from-covid-19/?sh=634430376043>(검색일: 2021년 4월 25일)
- “Trump gives glimpse of ‘Indo-Pacific’ strategy to counter China” Financial Times. 2017. 11. 10.
<https://www.ft.com/content/e6d17fd6-c623-11e7-a1d2-6786f39ef675>(검색일: 2021년 1월 2일)
- “Trump administration pushing to rip global supply chains from China: officials” Reuters. 2020. 5. 4.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usa-china/trump-administration-pushing-to-rip-global-supply-chains-from-china-officials-idUKKBN22G0BZ>(검색일: 2021년 2월 6일)
- “U.S. national security adviser says ‘Quad’ key in Indo-Pacific” Japantimes. 2021. 1. 30.
<https://www.japantimes.co.jp/news/2021/01/30/asia-pacific/politics-diplomacy-asia-pacific/sullivan-quad-china/>(검색일: 2021년 1월 7일)
-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saddened’ as Italy signs up for China’s belt and road project” SCMP. 2019. 3. 28.
<https://www.scmp.com/news/china/diplomacy/article/3003610/us-secretary-state-mike-pompeo-saddened-italy-signs-chinas>(검색일: 2021년 3월 8일)
- “Why Belt and Road Initiative is anything but debt trap” Chinadaily. 2019. 4. 14.
<http://www.chinadaily.com.cn/a/201904/14/WS5cb26c77a3104842260b60d7.html>(검색일: 2021년 2월 2일)
- 「政府工作报告」中国政府网. 2021. 3. 12
http://www.gov.cn/premier/2021-03/12/content_5592671.htm(검색일: 2021년 3월 25일).
- 「政府工作报告」人民日报. 2020. 5. 20.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20-05/30/nw.D110000renmrb_20200530_1-02.htm (검색일: 2021년 3월 30일).

- 「共建“一带一路” 开创美好未来第二届“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圆桌峰会联合公报」,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19. 4. 27.
<https://www.mfa.gov.cn/web/zyxw/t1658762.shtml>(검색일: 2021년 3월 30일).
- “翟东升. 一带一路进入第二阶段” 一带一路网. 2019. 4. 25.
<https://www.yidaiyilu.gov.cn/ghsl/gnzjgd/87393.htm> (검색일: 2021년 4월 5일)
- “习近平向一带一路国际合作高级别视频会议发表书面致辞” 新华网. 2020. 6. 18.
http://www.xinhuanet.com/politics/leaders/2020-06/18/c_1126132341.htm(검색일: 2021년 4월 28일)
- 「习近平在博鳌亚洲论坛2021年年会开幕式上的视频主旨演讲 (全文)」 新华网. 2021. 4. 20.
http://www.xinhuanet.com/politics/leaders/2021-04/20/c_1127350811.htm(검색일: 2021년 4월 23일)
- 「2021年4月21日外交部发言人汪文斌主持例行记者会」 外交部. 2021. 4. 21.
https://www.fmprc.gov.cn/web/fyrbt_673021/t1870410.shtml. 2021/4/21/ (검색일: 2021년 4월 28일)
- 「习近平在第二届“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开幕式上的主旨演讲 (全文)」 新华网. 2019. 4. 26.
http://www.xinhuanet.com/silkroad/2019-04/26/c_1124420187.htm (검색일: 2021년 2월 2일)
- “中 ‘백신 외교’ 독점 깨지자... 못마땅해도 애써 표정 관리” 한국일보. 2021. 4. 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0711120000234>(검색일: 2021년 4월 8일)
- 「박근혜 대통령, 한-중 MOU 서명식 참석」 외교부. 2015. 10. 31.
https://www.mofa.go.kr/www/brd/m_4076/view.do?seq=356908(검색일: 2021년 1월 5일)
- 「제15차 한중경제장관회의 주요 결과」 기획재정부. 2018. 2. 2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15542&menuNo=4010100(검색일: 2021년 2월 5일)
- 「제2차」한중 경제협력 1.5트랙 민간 공동협의회 개최」 외교부. 2019. 3. 27.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9096(검색일: 2021년 1월 5일)